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7. 17.(일)	
담당 부서	학술진흥과	책임자	과 장	하유경 (02-2100-6604)
		담당자	서기관	민미홍 (02-2100-6653)
담당 부서	대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혜림 (02-2100-6368)
		담당자	사무관	황소정 (02-2100-6367)
담당 부서	학원정책팀	책임자	팀 장	이현미 (02-2100-6218)
		담당자	사무관	오인택 (02-2100-6380)

투고금지 처분 및 자녀 고액과외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언론사명 : MBC 뉴스데스크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2022. 7. 17.(일)

□ 제목 : “교육부총리의 자격”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 금일 보도된 박순애 부총리에 대한 논문 투고금지 및 자녀 고액과외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부총리는 그간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논문의 중복게재, 부당저자 의혹 등의 가능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청문준비단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온 바 있습니다.

○ 지난 6.6일 자 MBC 보도에서 2001년 12월 ‘도시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이 2000년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에 실렸다는 점을 근거로 중복게재 가능성을 지적하여,

○ 해명자료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로부터 부당한 중복게재나 투고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금일 보도된 ‘국제행정학리뷰(IRPA, 한국행정학회 발간) 교통 관련 논문은, IRPA 게재당시 부총리가 귀국 후 국내에 있던 상황으로, 1999년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미국 논문이 저널에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 논문 자진 철회는 본인의 연구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 서울시 산하 연구원 입사시 연구실적으로 활용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동 연구원은 당시 박사채용 과정에서 논문실적이 평가항목에 없었으며, 이에 채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 당시 채용은 폐기물 관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발표 및 면접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자녀의 입시학원 수강료에 관련하여, 쌍둥이 아들이 대학 입시 당시 고액의 입시컨설팅을 받았다는 보도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장남은 수시 입학이 아니라 정시로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 차남은 2018년도 고3 당시, 회당 20만원대의 자기 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으로, 2019년 대상 학원에 대한 고발 수사 건과는 관련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에,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금번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왜곡된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붙임: 인사청문준비단 보도 설명자료(6.6, 6.7, 6.14일자)

보 도 참 고 자 료 (2022. 6. 6.)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해명자료

인사청문회준비단
대변인 최성부(010-6458-3675)

박순애 후보자 논문 관련 해명

- 금일 보도된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후보자 논문은 2001~2002년도에 작성된 것이나, 당시에는 중복게재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시기였을 뿐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된 시점은 2015년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2015년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에 따라서도 모든 중복게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수령,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의 경우,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하여 연구비를 수령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아울러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후보자가 위 학술지에 투고금지를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참고1]

- 방송에서는 2001년 12월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발간)'에 게재된 논문이 2000년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연세사회과학연구소)'에 실렸다는 점을 근거로 중복게재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연세사회과학연구'는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내학술지에 불과하며, 후보자는 이를 업적평가에 활용하거나 연구비를 수령한 적도 없습니다.
- 연구물 1편을 4차례 재활용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정책연구보고서를 프로시딩 1건, 논문 2건으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예비보고 성격의 프로시딩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별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2개의 학술논문은 정책연구보고서 중 각각 다른 장을 발췌하여 각기 다른 주제의 논문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부 발간 보고서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학계에서 인정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참고2]

-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2000, 연세사회과학연구)"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2001, 도시행정학보)"는 부당한 중복게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당시 '연세사회과학연구'는 교내학술지로 연구업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실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 '도시행정학보'에 게재하게 된 것으로, 2000년 논문으로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연구업적으로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 그 다음, 정책연구보고서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개선 방안(2001,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유사 연구물(3건)도 부당한 중복 게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비교 대상 연구물은 후보자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재직하면서 기본과제의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정책연구보고서이며, 유사 연구물로 지적된 연구물 1건은 프로시딩, 2건은 학술논문입니다.

■ **비교대상 정책연구물 :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개선 방안 (이00·박순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를 진행하다가, 연구완료 시점에서 후보자의 이직으로 인해 시정연구개발연구원 부서장(이00)을 주저자로 표기**

<프로시딩> 민간위탁 관리운영의 문제점과 효과성 분석

서울시 청소년 수련관을 중심으로(이00·박순애, 2002년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

<학술논문> 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울시 청소년 수련관의 민간위탁과정을 중심으로(박순애, 한국정책학회보)

<학술논문>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분석 및 관리개선 방안 (박순애, 한국행정연구)

○ 이 중 프로시딩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어 부당한 중복 게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 프로시딩(proceeding)이란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통해 아직 검증받지 않은 가설이나 미완성의 연구에 대하여 여러 분야의 동료들에게 예비보고의 형식으로 발표하여 타당성을 묻는 연구활동의 일부

□ 또한, 2개의 학술논문은 정책연구보고서 중 각각 다른 장을 발췌하여 각기 다른 주제의 논문으로 발표한 것으로, 정부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는 현재와 달리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서 연구내용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학술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 2002년 당시는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이나 “중복게재”에 대한 원칙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이며,

-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2007년 제정된 이후, 2011년에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에 대한 원칙이 제시되었고, 부당한 중복게재는 2015년에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되어, 그 이전 논문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후보자는 상기 사항들과 관련하여 투고금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보 도 참 고 자 료 (2022. 6. 7.)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설명자료

인사청문회준비단
대변인 최성부(010-6458-3675)

박순애 후보자 논문 관련 설명

- 금일 보도된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논문의 부당한 중복게재와 부당한 저자 표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첫번째, 2007년 “표준화 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2007, 행정논총) 논문은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닙니다.
 -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프로시딩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 프로시딩(proceeding)이란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통해 아직 검증받지 않은 가설이나 미완성의 연구에 대하여 여러 분야의 동료들에게 예비보고의 형식으로 발표하여 티당성을 묻는 연구활동의 일부
 -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된 시점은 2015년도로,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두번째, 2006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2006, 한국환경정책학회) 논문은 후보자가 ‘교신저자’로서 연구한 논문이 맞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제1저자(조○○)는 후보자에게 2005년 논문을 교내 학술지(2005, 생명자원연구)에 게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동 논문의 철회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철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1 :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한 설명]

-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프로시딩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어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된 시점은 2015년도로,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2008년 제정되어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와 연구부적절 행위*(중복게재, 부당저자, 권익침해 등)로 구분하였고, 이 중 중복게재는 연구부적절 행위로 규정하였고, 2020년에 중복게재를 연구진실성위반행위로 정하였음
 - * 2017년 김상곤 전 부총리 후보자 경우, 석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서울대에서는 "연구 부적절행위"로 결론을 내렸고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 2015년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더라도 모든 중복게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수령,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의 경우,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하여 연구비를 수령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부당한 중복게재' 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2 :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설명]

- 두 번째, 2006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2006, 한국환경정책학회) 논문은 후보자가 교신저자로서 연구한 논문이 맞습니다.
- 후보자는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논문을 다시 살펴보던 중 2005년 논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당시 제1저자(조○○)에게 경위를 확인해보니,
 - 당시 제1저자(조○○)가 후보자에게 2005년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고 싶다고 협업 연구를 요청해 와 후보자는 교신저자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하여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제1저자(조○○)는 후보자에게 2005년 논문을 교내 학술지(2005, 생명자원연구)에 게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동 논문의 철회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철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 도 참 고 자 료 (2022. 6. 14)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해명자료

인사청문회준비단
대변인 최성부(010-6458-3675)

박순애 후보자 논문 관련 해명

-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2014년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그 이후 2015년 학술논문과 2016년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것입니다.

- 관련 논문 현황 -

정책 연구 보고서	2014.4. 지자체 지역별 규제체감도 조사설계 및 결과분석 (박순애, 손○○, 대한상공회의소)
학술 논문	2015.12. 지방정부 규제행정의 성과요인에 관한 소고 : 규제체감도를 중심으로 (박순애, 손○○, 행정논총 제53권 4호) * 이 연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행정학회(책임연구원 박순애교수)에 발주한 '지자체 지역별 규제체감도 조사설계 및 결과분석'(2014. 04. 25. ~ 2014. 08. 31.)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박사 학위 논문	2016.2 규제개혁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중심으로 (손○○, 박사학위 논문) * 본 학위논문은 '지역별 규제체감도 조사설계 및 결과분석(2014, 책임연구원 박순애)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음. 상기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정부 규제행정의 성과요인에 관한 소고"(2015, 행정논총, 박순애, 손○○) 논문이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의 일부가 학위논문에 인용되었음

- 2015년 학술논문과 2016년 박사학위논문은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2014년 연구보고서에서 출발한 것으로, 후보자의 연구보고서가 학술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전되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 2015년 학술논문과 2016년 손○○ 박사학위 논문은 다른 논문입니다.

* 참고로, 두 논문간(2015년 학술논문과 2016년 박사학위논문) 유사도는 1%임

- 손○○ 학생의 2016년 박사학위논문에 “2014년 연구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고, 2015년 논문 내용의 일부가 본 학위논문에 인용되었음”이라고 밝히고 있고, 두 논문은 같은 조사 데이터를 활용했음을 밝히면서 다른 논문임을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 박사과정 학생에게 교신저자를 맡기게 된 것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공동 저자간 역할 배분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후보자는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직접 원고를 작성하였으므로 제1저자를 한 것이고,
- 손○○ 학생은 연구보고서와 학술논문을 토대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 나가는 과정이었으므로, 후보자는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학생에게 교신저자를 맡긴 것입니다.

* 저자의 종류에는 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등이 있는데, 교신저자란, 전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자로 학술지의 행정적 요구사항 등을 책임지고 확인해야 하는 역할